

## [ 오피니언 ]

## 월/요/광/장

박석두



쌀은 농가의 73%가 재배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지면적의 53%, 전체 농업 생산액의 24%를 차지한다. 우리 민족의 생명을 지켜온 주곡으로 반드시 키우고 가꾸어야 하는 작물인 것이다.

갈수록 쌀 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어들어 쌀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소득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 해 쌀 생산소득은 단보당 49만원에 불과해 농민들도 쌀 농사를 기피한다. 쌀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수매제도를 통해 쌀 가격을 지지함으로써 쌀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2005년부터 쌀 직불제가 도입되었다.

쌀 직불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농사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지급되며, 이 농지에서 실제로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지급받을 수 있다.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따로인 경우 소유자는 받을 수 없고 경작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농지 소유자가 자기 농지를 남에게 빌려주지 않고 대신 논갈이, 모내기, 베베기 등을 농기계 작업자에게 위탁하여 경작하

는 경우 그는 엄밀히 말하면 경작자라기보다 경영자라고 할 수 있지만, 쌀 직불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농지 소재지에 사는 지방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을 경우 쌀 직불금을 받더라도 부당한 수령이 아니라 적법한 것이다. 또한 농지 소유

##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해법 뭇가

자 본인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부인이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이 농사를 짓는다면 쌀 직불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

아들이 분가하여 세대가 다른데 부모가 아들 명의의 농사를 짓는 경우 쌀 직불금은 부모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아들 이름으로 신청하게 되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가 된다.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

쌀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은 쌀

판매가격이 목표가격(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 80kg당 17만원)보다 낮은 경우 목표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의 85%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은 쌀 가격과 관계없이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해 그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면 1ha당 74만6천원, 농업진흥 지역이 아니면 59만7천원이 지급된다.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게 고정직불금이다.

쌀 직불금이 폭발적인 사회문제로 비화한 것은 부당 수령자 때문이다. 실제 경작자가 아닌데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전체 직불금 수령자 98

만여명 중 17만명에 달한다. 그 중에는 국회의원, 공무원, 의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포함돼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올해도 그에 해당되는 명단을 파악하고 폐기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명단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심지어 부당 수령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당 수령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처벌 방식으로

명단을 공개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게 적절한 것일까? 쌀 직불금의 근거 법률인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부당 수령자에 대한 처벌조치로서 지급액을 환수하고 3년간 지급신청을 못하도록 하도록 했다.

부당 수령자, 특히 농지의 실경작자가 따로 있는데 농지소유자가 수령한 경우 그것은 곧 농지임대임이 분명하며, 농지 임대자 중에는 '농지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농지를 임대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임대농자는 농지법 위반으로서 농지를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농지처분령제'를 적용할 수 있다. 농지처분령이 내려지게 되면 1년 안에 처분해야 하며,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정당한 사용에 의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농지소유자가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불법·부당 수령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농지법의 처분령제를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알고 있다. 그러나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우선 현행법 절차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법조 칼럼

류재규



현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지고, 병역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필수적으로,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협약에 합하여 병역의무를 진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으면, 협약으로 관정을 받으면 2년(육군)에서 24개월(공군)의 군복무를 해야한다.

이러한 군복무 중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국가보훈처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아래에 표시한 것과 같이 단순히 애국심에 호소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라고 단순히 애국심에 호소하는 시대가

## 군복무 중 공상 관련 법률 제정 필요

대한 불복수단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1천324건(보훈관련 사건)이 심리되었는데, 14%밖에 인용되지 않은 정도로 그 인용률은 극히 미약하다.

행정소송 또한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있는 구조여서 인과 관계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구제받을 경우도 매우 드물다.

특히 희귀병이나 정신질환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군에 입대한지 1년 미만에 발병한 질병의 경우 군복무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과로와 관련한 질병악화나 발병에 대해서는 부대 업무와 관련한 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지 않아 같이 근무했던 주변인들의 진술에 주로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반복된다.

따라서 실제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자의 대다수는 법률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필연적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짠은 날 군대에 갔다가 다쳐서 조기 의병 전역한 뒤 사회생활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 심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이마저도 요건 미비로 기각당했을 때 받는 충격은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라고 단순히 애국심에 호소하는 시대가

기고

전갑길



우리 지구는 현재 지구 온난화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구가 더워지면 먼저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 바닷가 저지대의 상당 부분이 잠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빙하 밀바닥에 있던 동성물질이 대기와 해수 중으로 방출되어 심각한 대기오염을 야기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대부분의 고등생물들은 살기가 힘들어진다. 반면 세균이나 이끼류, 곤충 같은 하등생물들은 활성화되면서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를 이겨내기란 불가능한 것일까? 현대문명은 인간의 생명 원리

를 위해 14명의 공무원으로 '그린 시티 광산' 전답조직을 꾸렸다. 이들은 ▲저탄소 인프라 구축 ▲탄소흡수원 확충 ▲저탄소 홍보 활동 ▲사업 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20여명의 학계, 경제계, 환경단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여기에 우수시책 발굴 보고회, 벤치마킹, 제안제도, 분기별 관련 교육, '전국학생·공무원아이디어공모전', '쿠폰제', 구간별 무료 자전거 확충, 탄소흡수나무 갖기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난 6월 광주시 최초로 탄

## '저탄소 그린시티 광산'을 향하여

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생명력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대문명 속에서 인간이 한동안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주 속에서 지구가 처한 환경이 그나마 약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우주 속의 지구가 상당히 불리한 환경에 처할 것이라는 과학적 예측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구의 위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인류의 전통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전통적인 삶에서 발견되는 생명의 원리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되살려 우리의 생명력을 키운다면, 급변하는 지구 환경에도 살아남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광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을 예방하고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토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저탄소 그린시티 광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개발과 발전의 개념을 과거와 단절이 아닌 재생과 조화로 전환시켜 인간과 자연 모두가 원-원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광산구를 광주의 허파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더 놀라운 일은 통닭을 하늘에 날려보내며 텔을 다 뽑은 진짜 생닭을 가져와 그 꿩지에 부탄가스 툴을 박은 후 모닥불에 달궈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중으로 솟구치게 하는 혁기적인 장난이었다. 청소년들이 따라 했다가는 큰 위험이 따르는 행동들이었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동영상으로 찌어 인터넷에 올리는 장난짓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동영상은 보고 한명이라도 따라한다 면 큰일이지 않는가. 통계에 의하면 이웃 일본의 농외소득 비

율은 64%, 대만은 78%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겨우 34%다. 농촌이 농외소득을 꾀할 수 있는 것이 1사1촌을 통한 관광농촌 체험일 것이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농촌 방문, 농촌체험이 이뤄졌으면 한다. 도시인이나 농민들 서로간에 언제든지 보고싶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 광산구청장〉

## 포털사이트 위험한 동영상 당장 제재해야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정보검색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 동영상 항목의 'tv팟' 카테고리에 들어갔더니 '부탄가스로 로켓 만들기' 동영상이 눈에 들어왔다. 기본적인 안전 대책과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로켓을 만들기 실험인 줄 알고 열어봤는데 그게 아니었다. 위험한 만한 장난이었다. 청소년들이 보고 무분별하게 따라했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었다.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자막 경고가 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고 문구가 되어 따라하고 부추기는 듯했다.

동영상 내용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부탄가스를 그대로 폭발시켜 공중에 날리는 장면, 수박을 함통 놓고 부탄가스를 폭

발시킨 후 그 추진력으로 수박을 박살내는 장면, 이어 같은 방식으로 우유통을 박살내는 장면 등이었다.

더 놀라운 일은 통닭을 하늘에 날려보내며 텔을 다 뽑은 진짜 생닭을 가져와 그 꿩지에 부탄가스 툴을 박은 후 모닥불에 달궈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중으로 솟구치게 하는 혁기적인 장난이었다. 청소년들이 따라 했다가는 큰 위험이 따르는 행동들이었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동영상으로 찌어 인터넷에 올리는 장난짓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동영상은 보고 한명이라도 따라한다 면 큰일이지 않는가.

▲심현수·광주시 북구 대촌동

## 시설

## 정부, 문화콘텐츠진흥원 이전 약속 지켜라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최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광주·전남 공동공동혁신도시 이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2일 국회 공기업특위에서 반드시 이전하겠다고 한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유 장관은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CTI)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의 이전 계획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지만 설득력이 없다. 정부가 약속한 문화관련 기관의 광주·전남 이전 무산이나 죽소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광주·전남이 다른 공공기관 대신 한전과 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을 공동유치한 것은에너지와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때문이다.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꺼내고 잡아떼며 판소리를 하고 있는 유 장관

의 발언은 납득할 수 없다. 문화콘텐츠 개발 등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정부의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계획된 업종으로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광주·전남이 다른 공공기관 대신 한전과 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을 공동유치한 것은에너지와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때문이다.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꺼내고 잡아떼며 판소리를 하고 있는 유 장관은 운용할 수가 충분하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광주·전남이 다른 공공기관 대신 한전과 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을 공동유치한 것은에너지와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때문이다.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꺼내고 잡아떼며 판소리를 하고 있는 유 장관은 운용할 수가 충분하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광주·전남이 다른 공공기관 대신 한전과 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을 공동유치한 것은에너지와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때문이다.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꺼내고 잡아떼며 판소리를 하고 있는 유 장관은 운용할 수가 충분하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광주·전남이 다른 공공기관 대신 한전과 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을 공동유치한 것은에너지와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때문이다.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꺼내고 잡아떼며 판소리를 하고 있는 유 장관은 운용할 수가 충분하다.

## 無等鼓

랑스가 공동교과서 발행을 통해 짓빛과 거의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공동교과서는 세계적으로 첫번째 사례로 꽁꽁 만큼 희귀한 경우다. 또 하나는 정치적·경제적·외교적 필요성에서가 아니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제안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만큼 이념적 혼란과 간극이 심한 나라로 들키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좌편향' 역사교과서의 개정을 요구하는 수구·보수진영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4·3사건이나, 여순사건, 5·18 민중항쟁 등 현대사의 대사건들이 또 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몰리고 있다.

에드먼드 버크는 "사회는 살아있는 사람간 연대일 뿐 아니라,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간의 연대"라고 말한 바 있다. 교과서가 미래세대 가치관 형성의 창이란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사태는 지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주승 사회부장 jsoh@kwangju.co.kr

##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禪榮 논설실장 金東永